

## 과학기술 국채발행의 과제

**얼**마 전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에 참석, “과학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후손들을 위해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과학기술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는 오 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의 문제제기에 정부내에서 첫공감의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지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의 빚을 내자는 것이다. 채권을 발행해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채를 산 사람에게는 정해진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국채를 과학기술 투자를 위해 발행하지는 논리는 이런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그 성과와 수익은 결국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므로 미래세대로 하여금 나중에 빚을 갚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종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 얘기가 과기부에서 제기됐지만 총리가 언급한 것 외에는 관련부처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 우선 재정당국부터가 묵묵부답이다. 과학국채를 발행하지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듯이 여기에는 또 그들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이다.

요즘 나라경제를 살리자면서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뉴딜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과 건설사업을 많이 일으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데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적자 재정을 각오해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것이 원래의 뉴딜이지만 지금 우리 나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국채발행 등을 통해 돈을 모아서 이를 풀기보다는 연기금이나 민간의 투자를 동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관리법 개정이니 민간투자법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돈은 직접 쓰기보다는 정부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쓰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도 있다. 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재정당국은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되받는다. 적자재정을 심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재정당국이 과학기술 투자를 위한 국채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당장의 경기회복 목적을 위해서도 빚 내기를 꺼리는데 미래투자를 목적으로 빚을 내자는 데 선뜻 동의하고 나설 리 없다. 게다가 국가채무 논쟁이 여야간에 가열되더라도 한다면 재정당국으로서의 이래저래 곤혹스러



글\_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ahs@hankyung.net

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들의 머리 속을 쉽게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재정당국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과학 국채를 발행하자면 무엇보다 그들의 논리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리 나라 연구개발투자가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얼마밖에 안되고, 또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적다는 그런 이유만 가지고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으냐는 말이 금방 되돌아 올 것이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학 국채를 어디에 사용할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사용처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정부가 돈만 집어넣는다고 과학기술 선진국이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쉬운 일일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정부돈을 집어넣어서 해야 할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이윤 동기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으로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한다면 그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 가능할 수도 있는 민간투자를 정부가 밀어내고 대신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과제가 있다. 그 돈을 정부가 정말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사실 지금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쓴다고 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탄생했다.

그 동안 부처간 ‘중복투자다’, ‘주먹구구식이다’ 등 과학기술예산 사용에 대한 갖가지 비판이 많이 나왔었다. 그런 비판이 정말 옳은지 틀렸는지는 제대로 따져봐야 하지만 말이다. 또 정부가 과학기술예산을 가지고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맡겨도 될 엉뚱한 분야에 낭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과학기술 예산이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히 말해 확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채가 발행되려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들어섬으로써 과학기술예산이 정말 제대로 기획되고 사용된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에 심어져야만 한다.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제 겨우 출범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국민적 확신을 얻어내도록 노력할 수밖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학 국채발행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사실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쪽은 현세대이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쪽은 미래세대다. 미래세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미래세대가 정말 이익을 볼 그런 과제들이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목적으로 빚낸 돈이 잘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래세대도 기꺼이 동의하고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현세대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간혹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우리 현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정부는 공적자금이다, 농업지원이다 해서 엄청난 돈을 잘도 쓰면서 왜 과학기술에도 그렇게 돈을 퍼붓지 못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냉정히 생각할 게 있다. 그런 모든 것이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확보됐다는 점이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정치인들을 귀머거리라고 한다. 아무리 말해도 경제적 원리를 정치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경제학자들을 보고 눈먼 장님이라고 한다. 정치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다. 바로 그런 점을 일찍이 깨닫고 경제학자들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다.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할 게 아닌가.

과학기술계도 정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에 쓰자고 하면 모든 게 옳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다. 과학국채발행도 마찬가지다. ㉔